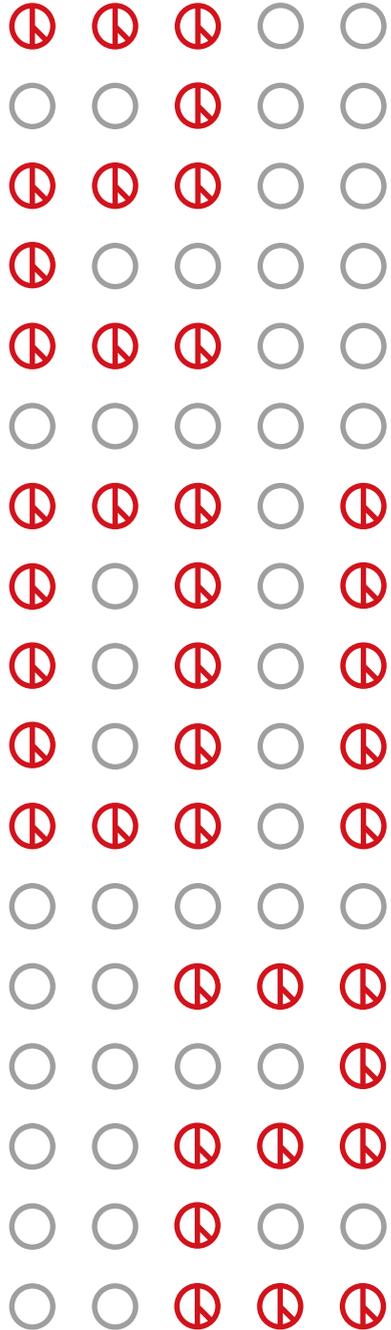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

사회진보연대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

사회진보연대



글 쓰는 순서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

여는 글

2012년 대선,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06

1장 경제위기와 대통령선거

세계 경제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10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하다 19

2장 경제민주화

요즘 대세는 경제민주화? 31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과 그 문제점 40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47

경제민주화, 과연 진보적 의제인가 53

3장 정치혁신

안철수가 꿈꾼 새로운 정치는 위험하다 59

지겹다, 반복되는 단일화 66

4장 노동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평가	7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줄줄이 문재인 캠프로	85

5장 동아시아·한반도

미중 갈등과 불안한 동아시아	93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그 문제점	100

6장 사회정책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둘러싼 안타까운 논쟁	110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과 그 문제점	122

7장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중진영 대중조직의 분열과 무기력한 대선투쟁	135
정치세력화 운동의 침몰: 200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 약사	142
세 명의 진보 후보	149
노동자 정치세력화, 무엇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155

맺는 글

2013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63
-------------------------	-----

2012년 대선,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다보니 1년 내내 정치 뉴스가 넘쳐납니다. 눈만 뜨면 쏟아지는 선거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다, 정치쇄신이다 하며 자기를 찍어주기만 하면 당장 세상이 바뀔 것처럼 선전합니다. 정치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보면, 한편으로는 ‘이 작자들이 도탄에 빠진 우리 민중들을 생각하긴 하는구나’ 하는 위안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 다르다’는 시쳇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선거 철새들에게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니 ‘아무도 찍을 × 없다’고 냉소하다가도, 선거는 선거고 아무리 미덥지 않아도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미워도 다시 한번 쿡 찍어주자’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간 진절머리나게 당하고 시달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야권단일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바라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진보진영이 사분오열된 마당에 ‘차선, 아니 차악이라도 지지해야 하나’ 아니면 ‘진보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무엇이고 이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대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면서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나 세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시기와 대선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 봐야 합니다. 소책자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는 바로 이러한 대선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토론했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소책자는 우선 이번 대선을 둘러싼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1-1절). 그리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심화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1-2절). 단적으로 경제위기는 경제민주화론이 대두된 배경이자 경제민주화를 제약하는 객관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민주화론이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부상

한 배경과 그 이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2-1절). 그리고 경제민주화론의 핵심 대상으로서 여아의 재벌개혁론(2-2절)과 복지정책(2-3절)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진보진영이 경제민주화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제안합니다(2-4절).

다음으로 경제위기에 동반하는 정치위기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모습이 ‘안철수 현상’ 및 ‘정치쇄신’ 논의로 이어지는 맥락을 분석합니다(3-1절).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명분 뒤에 가려진 야권단일화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3-2절). 정권교체 또는 야권단일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노동자운동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재인 후보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이 실제로 진보적인지를 검토한 뒤(4-1절), 문재인 캠프로 노동자운동 전현직 간부들이 속속 이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4-2절).

이어서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면서(5-1절) 차기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합니다(5-2절). 사회정책으로는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화두로 여성정책과(6-1절), 교육정책(6-2절)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중운동의 대선 대응 현황을 살피면서(7-1, 7-3절) 진보정당 또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7-2절) 그 대안적 방향을 모색합니다(7-4절).

결론으로,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혼란을 딛고 이번 대선을 경과하며 등장할 새로운 정권에 맞서 2013년 이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이번 대선 정세를 분석하고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747 공약, 즉 ‘연평균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2011년까지 4년간 평균 3.1%로 역대 정부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올해 2% 초반 성장이 예상되므로 5년간 평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 1]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 비교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11)
성장률(%)	7.4	5.0	4.3	3.1

야권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격합니다. 반대로 여권은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

며, 오히려 위기 시기 세계 평균 2.9%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았냐면서 위기를 무난히 넘겼다고 방어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표 2]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비교 (2008~2011년)

국가	미국	유로존	일본
성장률(%)	0.2	-0.2	-0.7

세계 경제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동반 침체에 빠졌을까요? 대체 위기는 언제쯤 끝날까요?

미국: 미약한 회복과 상존하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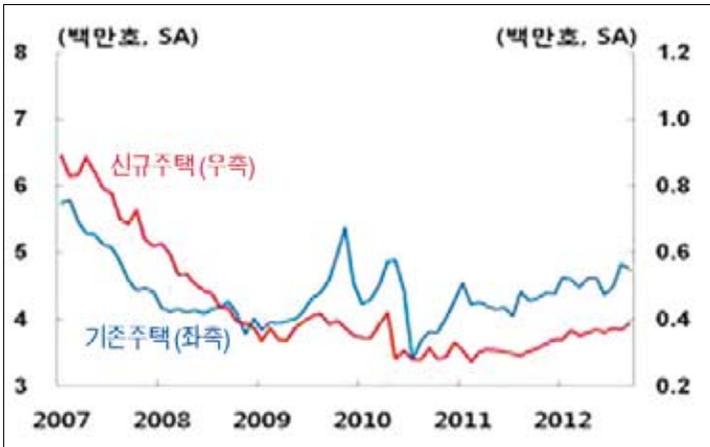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금융위기는 곧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경제는 1년 반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009년 3/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위급대책으로 사용했던 대규모 적자재정 정책과 제로금리·수량완화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림 1] 미국 실업률 및 고용증감



[그림 2] 미국 주택판매량



최근 대선을 치른 미국은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2012년 3/4분기 현재 경제성장률(연률 환산 2.7%), 실업률(7.9%), 주택시장(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모두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조금 낮아지는 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림 1], [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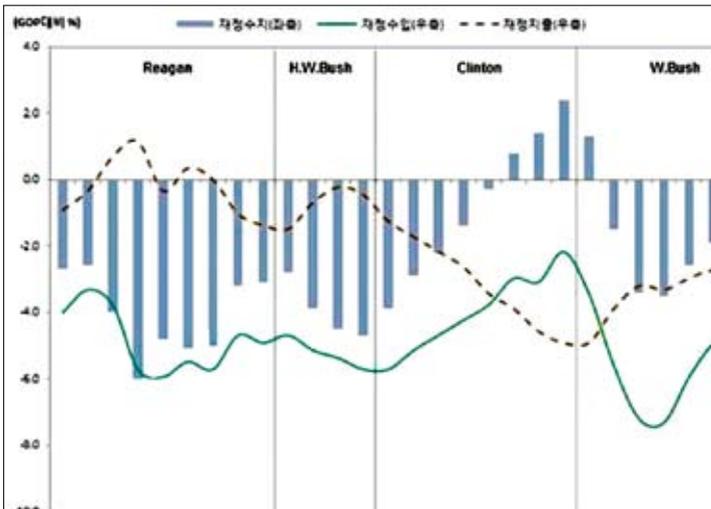
재정절벽(fiscal cliff)

2011년 5월 미국 정부부채 규모가 당시의 정부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에 근접하면서 기술적 디폴트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미 의회는 8월 초 정부부채한도 상향 조정, 재정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예산관리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감세안의 종료 및 세제개편 △2013~22년 중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등의 조치 외에도, △민주 공화 양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으로 1.5조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합의를 2011년 11월까지 마련토록 하였으나 양당은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만일 올해 안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통제법에 의한 강제삭감조치를 완화 또는 무력화할 대체법안을 입법하고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연방부처 및 기관의 예산이 2013년 1월부터 강제삭감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재정절벽' (fiscal cliff)이란 이렇듯 강제적 재정지출의 축소와 감세조치들의 종료에 의해 경제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오랜 골칫거리인 이중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국

방지출의 증가로 2002년 이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7-2009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급격히 심화하였습니다([그림 3] 참고). 게다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채무한도 증액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른바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3] 미국 재정수지와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출처: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Historical Tables

재정적자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미국에게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실 2000년대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정부에 돈을 댄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경제위기가 닥치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 바꾸어 말하면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려 대중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달러화로 표시된 부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잠재적 적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대응에 무능한 유럽

미국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연준의 제로금리 및 수량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간신히 봉합하며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면, 유로존은 이미 재정위기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라는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로존 주변 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위기에 대응할 방법 역시 부족합니다. 미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자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있지만, 유로존은 유로본드와 같은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승인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적으로, 2008년 미국의 경우 2주 만에 구제금융 정책이 의회에서 승인된데 반해, 2011년 유럽 금융안정기금(EFSF)기능 확대를 위한 유로존 17개국의 의회 승인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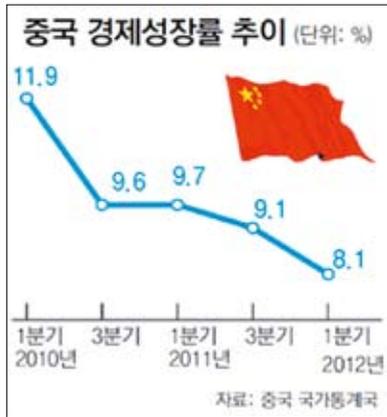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량완화정책을 통해 정부의 구제금융 및 적자재정 정책을 지지한 데 반해,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 정부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재무부 및 여타 경제적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조직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했지만, 그러나 유럽에는 재무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ECB가 경제적 국가장치의 가교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유로본드 발행이나 ECB의 국채매입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의 강력한 성장세도 최근 둔화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보면,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기지표가 악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009년 1/4분기(6.6%)이래 최저치인 7.6%로 6분기 연속 하락할 정도였지요. ([그림 4] 참고).

[그림 4]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중국은 중앙정부가 9월에 총 1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확

대, 소비보조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10개 지방 정부도 7월 이후 총 12.5조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하였고요.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세 약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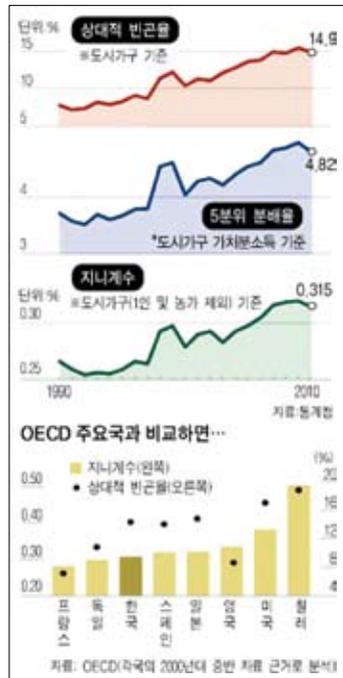
세계 경제위기라는 제약 속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당선되면 산적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경제위기 상황은 대외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높은 한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어떤 후보가 당선된들,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한들 공통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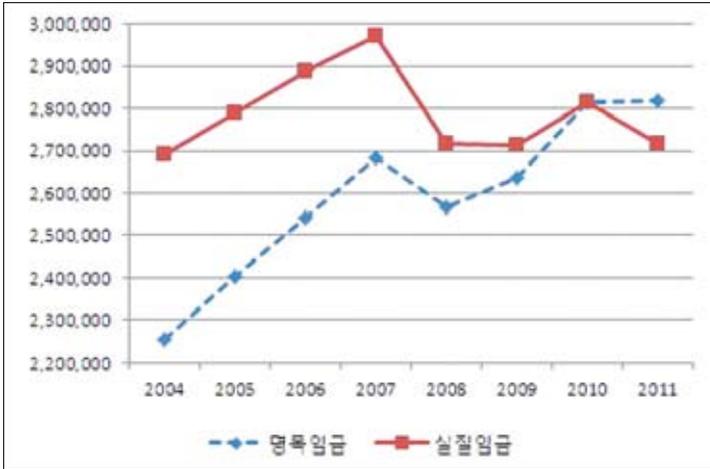
다음의 두 그림에서 보듯이 민중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한국의 경제지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2008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치들만 보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너도나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 경제의 조

[그림 1] '소득 불평등 지표'로 본 한국 소득분배



건과 상황을 보면서 예측해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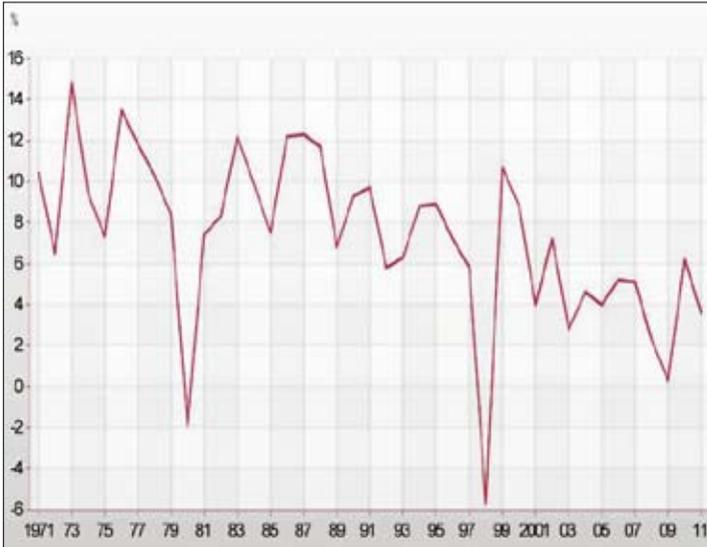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실질임금 추이



장기 저성장 경로에 접어든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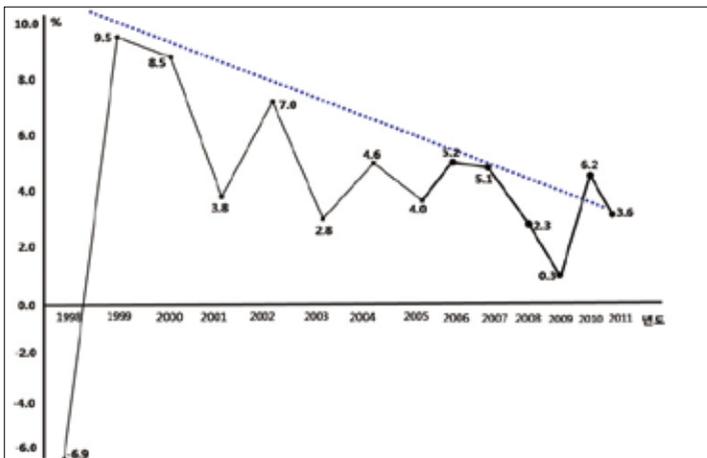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장기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1997-98년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5% 내외로 급락하여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그림 4] 참고).

[그림 3]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197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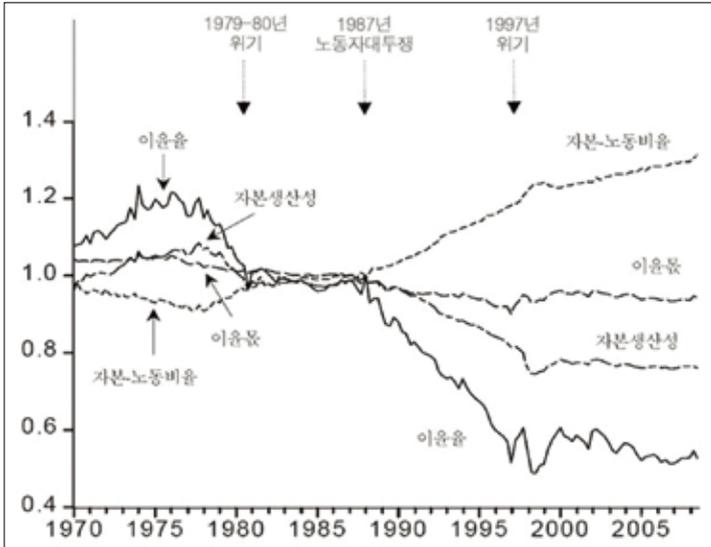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그림 4] 1997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와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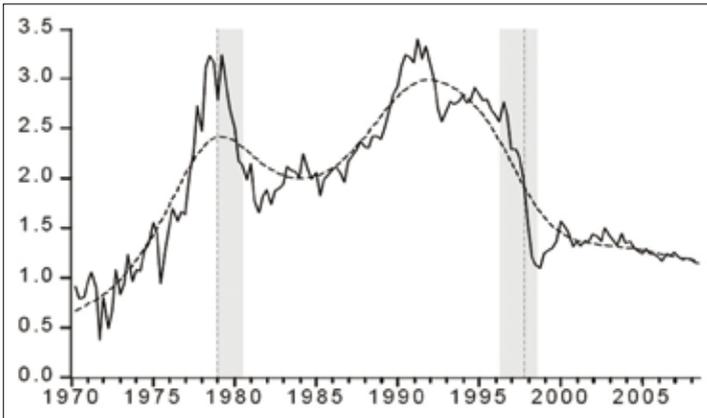
[그림 5] 한국 경제의 근원적 추세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경로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 정의되는 이윤율의 하락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한계이자 ‘공황의 궁극적 필연적 원인’입니다. 이윤율은 자본생산성과 이윤몫의 곱으로 분해되는데, 이윤율 하락은 대개 추세적 요소로서 자본생산성 저하와 관련됩니다. [그림 5]를 보면, [그림 3]에서 관찰되는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 즉 1979-1980년 위기와 1997-1998년 위기를 전후하여 이윤율 및 자본생산성의 하락, 노동생산성 및 임금의 둔화, 그리고 자본-노동 비율의 증가가 관찰됩니다. 이 두 번의 위기를 순환적 위기와 구별하여 구조적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축적률의 하락을 야기합니다. 아래 [그림 6]에서 보듯 1997년 이후 한국경제의 자본축적률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매우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윤율 하락이라는 기본 요인 외에도 △국외직접투자 와 같은 자본 이동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행태 △기업 인수·합병(M&A) 중심의 투자행태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배당금의 증가와 같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행태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실물투자의 기피 현상 등이 실물투자를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림 6] 한국 자본축적률 궤적



자본축적률의 하락은 구조적 실업을 낳고, 이는 다시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확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민생 위기라 불리는 현상들

인 것이지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한다 해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순환의 저점에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한층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하듯이,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 초민족자본의 갑작스러운 철수 등을 견딜 여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수출 주도 성장과 높은 금융개방도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금융개방도가 높아 초민족자본에 의존적이며 그 이동에도 민감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이 높아야겠지요. 수출경쟁력은 기술력이 높을수록,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저임금 생산이 가능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업이 단기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지금, 생산기술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화가치를 낮추는 것, 즉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초민족자본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정부는 초민족자본에 대한 철저한 규제보다는 이들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게끔 경제구조를 초민족자본에 유리하게 바꾸는 식으로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선택지는 저임금 생산뿐입니다. 노동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겠지요. 임금도 적게 주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현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IMF 위기 이후 초민족자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대폭 허용하는 법·제도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세계화 전략은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플랜’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의 ‘선진통상국가론’,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구상하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구상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거점은 각종 기업서비스와 국제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민족자본의 동북아시아 지역 지사와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 중심지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직접투자’는 외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를 지칭합니다. 보통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접투자자로 간주합니다. ‘증권투자’는 투자수의 획득을 위한 외국과의 주식, 채권 거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파급효과는 직접투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투자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유발효과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직접투자의 성격이 최근 들어 단기자금화하고 M&A형 유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부유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재벌과 은행, 민영화된 공기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외국인이 각각 40~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KB, 하나, 신한금융지주 역시 각각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습니다. 본래 공기업이다 민영화된 KT와 KT&G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9%와 60%에 이릅니다.

자본도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불안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심화될 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통화를 대량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IMF 이후 금융자유화에 따라 국내 자본이 국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 시에 한국으로부터 자본을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주식, 채권 등 종류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자금을 빼 미국이나 다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초민족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규제 완화, 세금감면, 의료·교육 개방 등이 추진됩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 발전이나 고용 확대와는 무관하게 초민족자본에 대한 특혜와 철저한 자본 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맞는 전략일까요? 돌아봅시다.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입니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관심이 없었고, 임금 하락, 비정규직 증가의 효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개방으로 인해 국부유출과 자본도피가 심각해졌습니다.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최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 문제로부터 촉발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국의 내년 성장률을 3.1%로 대폭 하향조정하면서(지난 5월에는 4.0%로 전망) 내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연도별 가계부채 추이



대선후보들도 각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그림 8 참조).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채무 재조정 △대출금리 인하 △신용회복대상자 확대 △금융회사의 기금조성 등입니다. 문 후보의 가계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뫼에타 3법'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부채를 개인

이 책임지지 않게 되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표 1] 박근혜, 문재인인의 가계부채 공약

후보	공약
박근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문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채무자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는 것을 금지해 최소 주거권 보장 ■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일명 '피에타 3법' 제정 방안 제시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

앞서 언급한 OECD 보고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등 재정건전화를 우선순위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0년 현재 34.6%(OECD 평균 97.9%)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낮은 것은 한국 재정 통계가 국제적인 통계 방식과 달리 정부부채 항목에 지방정부, 일부 공기업, 일부 기금 등을 제외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 393조원인 정부부채는 3배정도 많은 1,241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 기준으로 2010년 정부부채 비율을 다시 낸다면 105.8%로 폭증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재정상황을 발미삼아 재정위기 위험을 강조합니다. 재정지출을 늘릴 때가 아닌데 대선후보들이 복지와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총선 직전 ‘복지 포퓰리즘 특별팀(TF)’을 꾸린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학자와 관료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재정건전화라는 제약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복지공약은 아마도 정부 부채 문제 또는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일부 상징적인 재벌개혁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재벌체제의 근간, 즉 재벌들이 생산적 투자를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노동력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바뀌내지 못한다면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금융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점점 더 개방도를 높이며, 국부 유출과 자본도피를 쉽게 만드는, 초민족자본의 투기처로 한국을 바꿔가려는 시도는 박근혜-문재인의 공통된 구상입니다.

그럼 이제 노동자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요즘 대세는 경제민주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747 공약과 같은 ‘경제성장’ 담론이 대세를 이뤘다면, 5년 만에 상황은 크게 반전되었습니다. 대선후 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된 배경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한국도 예외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의해 민중들의 삶의 고통이 가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주위를 둘러보니 재벌과 정치권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하청회사

를 쥐어짜면서 재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열매는 중소기업에도, 지역 상인들에게도,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벌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집단 백혈병 문제에 대한 해명과 보상을 제기해도 삼성은 사과논커녕 제대로 된 역학조사마저 가로막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007~2010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은

: 계열사수 54.8% 증가

: 자산총액 76% 증가

: 매출액 79.5% 증가

: 당기순이익 50% 증가

2012년도

최저임금: 월 957,220원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급여: 월 908,000,000원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위기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지배계급이 이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에서조차 민중들의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습니

다. 동요하는 민심을 이대로 두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반 월스트리트 시위나 유럽의 대대적인 총파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배계급은 민중의 봉기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위기와 불만을 관리하려는 지배계급의 속셈이 반영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 1] 박근혜, 문재인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박근혜	문재인
1.경제적 약자의 확실한 권익 보호	1.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2.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2.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3.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 총수 일가사익편취 엄격 대처	3.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
4. 기업지배구조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화
5. 금산분리 강화	5.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6.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단적으로 2007년 대선에서 규제완화, 감세와 같은 전형적인 친재벌적 경제 성장 공약을 내세웠던 한나라당도, 올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정강정책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명시했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대통령 측근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로 여당이 대대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는 이명박 정부와의 이미지 차별화가 핵심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 든 11월부터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을 병행하

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입장이 다시 변화합니다. 이제 이명박과의 차별화보다는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민주화’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들

양 후보의 캠프에는 모두 예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987년에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이 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재벌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생태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재벌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대립하는 자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대기업의 수탈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탈할 수 있는데 양보하는 기업이란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은 이미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학자들은 헌법 119조 2항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하는데, 이때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부작용이 생길 때 제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지적하듯, 시장 만능주의가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은 진보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완고한 긴축정책에 의한 물가관리, 독점적 대자본의 시장지배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복지정책은 잔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사상사적으로 보나 현실정치상으로 보나 독일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위한 진보적 대안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 내부로부터 ‘경제민주화

는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에 근거한 조작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공약 중 당초 재벌 개혁방안으로 마련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공약을 삭제하였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론'조차 친재벌 새누리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2003-2005년)과 정책특별보좌관(2004-2006년)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극이 아니고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를 옹호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약자, 지배주주 대비 소액주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사용자 대비 노동자 등이 경제조직에서의 참여가 증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으로 강도 높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재도입을 주장하고 FTA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론으로부터 ‘반기업 반개방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고 평가됩니다. 그가 스웨덴 사민당의 친기업 정책이나 노조의 임금인상 자체 정책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스웨덴은 거대 법인자본의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 왕성한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일찍이 독점기업을 용인하고, 차등 의결권을 보유

하며, 아주 낮은 법인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와 거대 법인가본이 공존해온 셈이죠. 그러나 거대 법인가본에 대한 용인이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된 것은 오랜 사민당 정부의 집권과 강력한 노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상훈,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신자유주의화」, 『사회운동』, 통권 101호를 참고하세요.)

한편 이정우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후 안철수 캠프의 경제팀 좌장이었던 장하성 교수를 문재인 캠프 내에 ‘재벌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두드러진 재벌개혁 흐름이었던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 행동주의는 자본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운동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 운동을 소수주주의 권리 옹호, 나아가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운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표되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투자자의 고배당에 의한 국부유출보다 한국 기업가치가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이사회와 경영자는 기업투명성을 통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소액주주운동은 단기실적위주와 노

동배제적인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재벌개혁이라고 호도하며,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장하성 펀드

장하성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한 뒤, 2006년에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태광산업, 대한화섬, 남양유업, 삼천리 등 10여개 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월 남양유업 주총에서는 배당금이 너무 낮고 회사 내에 보유한 현금은 너무 많으며 회사 측이 제시한 배당금의 25배 규모를 요구하다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재벌에 맞선 투쟁을

한편, 재벌은 '경제민주화' 불을 타고 재벌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 언론과 학자들을 대거 동원해서 경제민주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개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재벌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또 삼성과 현대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웬 말이냐, 재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재벌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나 독재 스타일 아니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론 자체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현대적으로 개혁하자거나 공정

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내용인데도, 재벌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벌에 대한 비난 여론과 민생고로 인한 높은 불만이 경제민주화론 안에 간혀 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비극입니다. 하다못해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론자들도 친기업 정책과 노조의 양보를 선호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고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된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가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재벌개혁’은 재벌의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몇몇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과 그 문제점

대선 경쟁이 본격화된 11월부터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야권의 공약을 두고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라 비판했고,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선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있어 재벌개혁 방안이 핵심적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박근혜

지난 총선 이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삽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중용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원조’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 등 재벌개혁 반대론

자들로 인해 새누리당 내 불화가 계속되어왔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재벌개혁 핵심 방안으로 강조했던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이 빠지게 되어 김종인 위원장은 ‘토사구팽’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재벌규제 방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환수, 재벌 관련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재벌 불공정 행위 규제 정책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재벌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규제를 말로 강조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정부 부처 내부의 반발로 용두사미에 그쳤을 뿐 아니라 효과도 없었습니다. 수출·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하도급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원청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실제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기업 규율 제도들은 공약에서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재벌들의 횡포가 재벌 총수 일가로 집중된 소유지배구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부터 완화되어오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공약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그 정책목표가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총제는 10대 재벌 중 이미 지주회사가 체제를 갖춘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재벌도 출자 비율이 낮아 실제 규제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 단 2개 뿐입니다. 또 출총제는 출자제한 비율의 기준이 높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반면, 기준이 낮으면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만약 출총제가 다시 부활되더라도 지난 20년간 폐기와 재도입과정에서 각종 적용제

외 및 예외가 인정되었듯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상형 순환출자란?

A사가 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출자하고, C사가 시장에서 A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환상형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물론 환상형과 순환은 비슷한 뜻이므로 그냥 순환출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순환출자의 결과로 A의 증자 과정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지분비율이 축소되며, 기업 내부에서는 비용 없이 계열사 간 의결권을 창출하게 되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유지됩니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A←B) 금지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이 증여세를 피하면서 지배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도 제시합니다. 재벌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가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주회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재벌들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나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약할 뿐만 아니라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만 충분히 확보하면 그

롭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1] 박근혜, 문재인 재벌개혁 정책 비교

		박근혜	문재인
재벌 지배 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 제 부활	실효성 없음	10대기업 순자산 30%까지 제 한
	순환출자금지	■신규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
	지주회사 규제강화	실효성 없음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 100%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율 20%씩 상향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유보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의무화
불공정 거래 규제	일감 몰아주기	민·형사상 책임	제재 및 과세 강화
	대기업 총수 배임 횡령	집행유예 불가	유죄 판결 시 경영 배제
	징벌적 배상제	최대 10배 배상	공정거래법 위반시 3배 배상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축소하고 ‘공정한 시장경
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재벌개혁론의
관점은 기업의 운영원리로서 주주가치 극대화 이론과 공명할 가
능성이 큼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이론은 1990년대 미국 증시의
호황과 금융자본의 성장을 가져다 준 기업 경영원리입니다. 그
러나 기업은 기업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재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소유자들에 대한 배당을 늘렸고, 이처럼 주주가치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에 심각한 불

안을 초래했습니다. (재벌개혁론의 법·제도적 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판은 류주형, 「4·11 총선, 각 정당의 재벌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운동』 통권 105호를 참고하세요)

재벌문제, 핵심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주류적인 재벌개혁론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재벌체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997-1998년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하청계열화 구조를 형성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부등가 교환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출·재벌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긴 반면 대다수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재벌 정점의 원하청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확대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핵심 대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40%에 달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잉여가 국외로 유출됩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국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민족적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재벌 주도 경제성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여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를 확대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태도는 한국의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한미 FTA와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후보가 향후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기초노령 연금 2배 인상”, “반값등록금” ……: 이렇게 복지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혜택을 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공약과 관련한 이슈는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지냐 보다는 복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수렴되어 온 두 후보의 복지 공약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주민투표가 진행되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지고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재창당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론을 3대 과제에 포함하고,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주창하면서 차별점이 희미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무리 정교하게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베껴도 카피(copy)는 카피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은 맞춤형 보육, 4대 중증 질환 보장처럼 선별적 요소가 더 강합니다. 또한 공공 보육시설, 공공의료와 같은 복지 전달체계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슬로건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고용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강조하며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 문구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국가 정책 전반을 살펴보면 총론적 차원과 지향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당의 정강정책인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창조형 복지국가론’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복지를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소득분배효과가 강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인적투자성격이 강한 보육이나 급식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복지수요가 가장 큰 빈곤층과 노년층의 권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 빈민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차가운 지하통로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후보가 장애등급제가 상징하는 잔여적 복지, 부양의무제가 보여주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실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복지국가 정책이 수렴되는 이유

빈곤과 불평등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자살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42.7%로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으며 평균 비율의 두 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후보가 복지 공약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현상적 이유입니다.

또한 복지국가 정책이 수렴되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경제는 2007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경제의 불안정성

이 심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복지 확대의 객관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후보들이 균형재정, 다시 말해 적자재정정책을 구사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 조달에 있어서 과거의 차관 방식과 달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이 커졌고,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200%를 초과했는데, 향후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부채로 합산되어 추계될 경우 높은 부채비율 문제가 불거지며 공기업 민영화나 복지 축소가 거론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두 후보가 말하는 복지국가는 유럽 복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질된 사회투자국가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재정적 제약 속에서 인적자본 투자와 중기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국가가 실현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향후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추계할 때, 추가적인 복지 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확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중기 재정건전화를 정책 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분절적이고 신축적인 형태로 변화합니다. (사회투자국가론과 민주당의 복지 이론의 바탕인 역

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최윤정,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사회운동』 통권 98호를 참고하세요.)

박근혜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한국형 고용연계복지’가 그러한 사회정책의 변형을 잘 표현합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새로운 사회적 위협을 생산합니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낙오자들을 선별하여 부족한 점을 보육·교육·주거·건강 정책들을 통해 분절적으로 필요시에 신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지원한다는 의미의 노동연계복지는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빈곤층에게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또한 노동빈곤, 즉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빈곤층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강화합니다. (노동연계복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원종현,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복지에서 노동으로」, 『사회운동』 통권 50호를 참조하세요)

복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선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복지공약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

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증세 공약을 철회한 것은 자본과 부유층의 저항을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지를 두고 자본과 노동자민중 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는 계급 역관계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주거, 건강 등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들의 구체적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이것이 노동자 운동의 단결의 계기로 작용할 때, 복지 확대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더욱 풍부하게 구체화되고 실질적 운동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 빈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공적운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힘과 요구에 입각한 복지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과연 진보적 의제인가

대선을 앞두고 제 정치세력과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중운동 내에서도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속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경제민주화의 기본방법은 노동민주화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슬로건이기도 한 노동민주화의 세부적 내용은 노동권 강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임금과 고용의 안정,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단체교섭에서 경영 인사 사항의 배제에 맞서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이나 민중운동이 경제민주화 담론에 편승하여 여기에 노동의제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경제민주화론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며 2011년 복지동맹에 이어 2012년 재벌개혁동맹을 시

도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일까요?

재벌 지배구조 개선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아

재벌 문제가 부패한 총수일가의 전횡과 불건전한 기업 관행 때문이라면 그 처방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벌 문제는 재벌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하청계열화 구조와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벌체제의 변화란 곧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과 이를 지지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벌개혁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론자들은 재벌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강조하고 튼튼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인 경기 SJM, 경주 발레오만도, 대구 상신브레이크, 충청 유성기업 등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해서 벌인 만행이었습니다. 이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부품 공급의 시간과 순서까지도 통제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서열(JIS) 방식의 생산을 확대해

왔는데, 강한 부품사 노조는 이러한 생산방식에 있어 방해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청 기업의 안정적 노무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부품사 자본의 이해도 여기에 일치했습니다. 유성기업은 내부거래 확대 속에 유성기업의 부를 비상장계열사로 더 이전하려는 오너의 계획에 노조가 걸림돌이었고, SJM은 2세 경영권 상속을 위해 공격적으로 기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재벌개혁론자들 중에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인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가 궁극적으로 재벌해체로 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 구도에 노동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한라그룹, 대우그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해체 자체가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룹에서 빠져 초국적기업 혹은 사모펀드, 또는 국내 중견기업에게 인수된 경우에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심각한 불안 상태에 놓였습니다.

재벌타협론과 재벌개혁론, 노동자를 위한 선택지는 없다

한편 장하준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이들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착취도, 비정규직 문 제도, 고용없는 성장도,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도 모 두 주주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주주자본주 의는 IMF를 통해 도입되었는데, 재벌 가문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 펀드들과 일종의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들은 재벌이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고, 신사업 투자도 재벌밖에 할 수 없으므로, 국민경제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재 벌해체론을 비판합니다. 대신 이들은 주주자본주의를 규제함으 로써 재벌 가문에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재벌 이 복지국가 건설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 정에서 스웨덴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금융을 억압하면 실물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이라는 가정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원인을 간과합니다. 현재의 금융화는 1970년대 구조적 위 기에 따른 자본의 대응으로 발생하였고, 금융자본의 이윤율 회 복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세계 경제는 다시 장기불황과 만 성적 경제위기의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서 자본주의 성장기에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제도화된 사 회적 합의와 복지국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코 포러티즘은 장기 불황과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코포러티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대량해고를 피하는 대신 노동시간 유연화에 합의한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강제하는 수단일 뿐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운동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벌문제에 접근해야

한국 경제는 재벌체제와 금융세계화 속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성장기 발전국가의 환상을 불러내어 재벌체제의 확립을 도모할 수도 없고, 반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더욱 심화하는 길을 도모할 수도 없는 곤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주체적 관점입니다. 경제민주화가 말하는 재벌개혁론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위계화 된 원하청구조와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어떻게 노동자운동의 단결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재벌문제에 접근하고 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위계화 된 원하청구조와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핵심고리

로서 연대임금 정책이나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적 위계의 정점에서 업종 전체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괄 통제하는 재벌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도록 노동운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원하청 관계와 관련된 의제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축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의제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 국부유출, 국외 이전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4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한국 전 산업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데, 현재 금속노조에 대해 악질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3M, 파카한일유압, 발레오전장, 포레시아, 보위터코리아, 보쉬전장, 컨티넨탈 등은 모두 외투기업입니다. 교섭도 어려워 국내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버티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 자본유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3천 명의 정리해고와 23명의 죽음을 만들어 낸 상하이차의 ‘떡튀’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용의무 부과,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 해외 본사와 협의할 권한 등 ‘떡튀’ 자본을 통제할 만한 대책들은 현재 경제민주화론에서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꿈꾼 새로운 정치는 위험하다

11월 23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 이후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와 함께 약속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민주화 세력과 미래 세력이 힘을 합치고, 나아가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통합의 선거 진용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안 두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은 이명박·박근혜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구태정치와 단절하고자 하는 모든 미래 지향적 세력’이 연대해야할 근거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통과 협치, 왜 안될까

새정치 공동선언은 △새로운 국정운영 △정치혁신 △정당혁

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첫째, 선언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이란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노사정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 등을 통해 협치의 시대를 열자는 내용입니다. 소통과 협의를 위해 애쓰겠다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 혈투고 싸움만 하는 국회에 환멸을 느끼는 상황에서 협치라는 말은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회가 이진투구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 원인이 대통령과 의원들의 소통의지 부족은 아닙니다. 여야 모두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큰 틀에서 정책적인 차별성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입니다.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하는데, 양쪽 다 민생에 대한 대안은 없으니 비생산적인 폭로전과 꼬투리잡기만 하며 지지율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핵심 원인은 소통 부족이 아니라, 무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가 안정적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 재벌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막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원하청 구조 속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았습니다. 또 최근 창조컨설팅 사례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공격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의 일

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노사정 협의란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권력, 대통령

둘째, 새정치 공동선언은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국무총리의 권한 보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지역구 의원정수 조정 등 정치혁신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회의원 의원정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다가, 문재인 후보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 선언문에는 “의원정수 조정”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반정치 정서를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부분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및 책임총리제부터 살펴봅시다. 한국의 대통령은 정부 영역은 물론이고,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또 지역주의와 결합해 국책사업 등을 매개로 연고지역에 배타적으로 이익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이러

한 1인 정점의 권력구조, 승자독식 구조인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나눠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나 책임총리제 등은 말의 성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대선에서 호남지역 기반의 김대중과 충청지역 기반의 김종필이 연합하여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으나 권력분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책임총리제 자체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권력안배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어장치들 역시 실질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느 정부든 통치에 권력기관을 이용해왔고 비판세력을 제거해왔습니다. 검찰, 경찰, 정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등 대표적 권력기관과 방송사 및 언론사에서 기존 사람들을 퇴출하고 자파세력을 배치해 장악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문제가 정략적 갈등 속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관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임으로 자기 임기 동안 권력을 남용하다가 무책임하게 물러나버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선거주기를 조정하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렵습니

다. 개헌 자체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 정략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낳은 정치권 내 분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선거 주기 조정을 위해서 자신의 임기를 축소하자고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도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정당축소가 정당쇄신?

셋째, 새정치 선언은 정당혁신을 위해 중앙당 권한과 기구 축소, 당의 분권화 및 정책정당화 추진, 강제적 당론 지양, 현행 국고보조금제 합리적 정비 및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 안철수 후보는 중앙당의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이 역시 문구 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언문에는 기존 정당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정당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는 방향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커진 것은 정치와 정치인들이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정치이념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역주의와 외부인사 수혈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온 한국 정당정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한 정치인 집단의 규모가 크고 그들에게 많은 세금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인을 줄이고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주장하면서 무능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대중의 반정치 정서에 힘입어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인민주의적 정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단기간에는 ‘그래! 변화가 필요해!’라는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안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금세 실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개혁에 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진준범, 「안철수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운동』 통권108호를 참고하세요.)

이는 안철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정치 전반이 개혁과 위기의 악순환을 만들어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크고 지역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유동적 중도층이 늘어나자, 정당들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변모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들은 대중의 선호를 빠르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당 내에 구축하고, 의원들은 파악된 여론을 바탕으로 미디어 정치를 펼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원들의 이념적 지향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스타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의 인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 선언이 주장하는 ‘중앙당 축소와 그 정책

적 기능 강화, 당론보다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강화'는 정당정치가 지역적, 이념적 존립기반을 잃어왔다는 사실의 방증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변모는 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념적 계급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휘발성 높은 유동적 중도층의 지지를 아주 잠시 동안 묶어두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심화됩니다.

지겹다, 반복되는 단일화

11월 한 달 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과정은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11월 6일 ‘후보등록 이전 단일화’에 합의한 후 협상 개시, 14일 단일화 협상 중단, 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박지원 지도부 사퇴 선언과 새정치 공동선언 합의, 19일부터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마라톤 협상과 갈등 등 단일화 과정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23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했던 단일화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일화가 필요했던 이유

애초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연대는 민주당 스스로의 힘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1년 민주당 지지율은 몇몇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였고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등 유력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의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교수가 혜성처럼 등장해 통큰 양보로 대중적 인기를 얻습니다.

민주통합당 및 야권연대의 열세는 올해 4.11 총선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총선 전 대부분의 미디어와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주통합당 및 야권연대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당명을 개정한 새누리당은 복지담론을 일부 수용하면서 단독 과반을 확보합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참신한 이미지와 폭넓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인식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온 명분인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야권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한 합의를 줄곧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내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지도부의 사퇴라는 가시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이후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단일화 드라마

1997년 15대 대선에서 DJP 연합이 이루어졌고,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대선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가 당연하게 인식되곤 합니다. 최근에도 작년 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박영선 단일화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정치판에서 당선을 목표로 한 단일화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만큼 정당정치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자기 노선에 따라 일관된 활동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검증받기보다는 오직 당선을 위해 뭉치고 그 내부에서 권력을 배분받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또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을 두고 단일화 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측 간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지난한 갈등이 지속됩니다.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은 본선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주장했고, 이 문항을 50% 반영하기로 합의하기까지 며칠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는 나머지 50%에 대해 적합도 조사를 할 것인지, 지지도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측은 ‘야권 단

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묻는 적합도 조사를 주장한 반면, 안철수 측은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지지도 조사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도 비슷했는데, 노무현 측은 "적합", 정몽준 측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론 끝에 양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문구로 타협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 재보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배심원단, 국민경선을 각각 몇 % 반영할지 문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동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2002년 단일화가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 그만큼 새롭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화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그 흥행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역시 지루한 단일화 드라마를 계속 끌었다가는 지지층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교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화 이후 문제인 후보는 구태정치 대 새정치라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면서 안철수 지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동적 중도층을 붙잡고 합니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측의 지원사격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문제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권력배분에 대해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캠프 재구성 및 향후 권력 배분과 관련된 많은 쟁점이 잠복해있습니다. 단일화 드라마는 싱겁게 끝났지만 또다시 지루한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평가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을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실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실현가능성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약 한 달 전 매일노동뉴스에서 실시한 ‘대선 후보 노동공약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사내하청·간접고용 해법, 저임금·근로빈곤층 해결 등 전 분야에서 1위 평점을 받았습니다. 종합 평점에서도 5점 만점 중 3.6점을 기록하여 박근혜(2.0점), 안철수(3.1점) 후보를 앞섰습니다.

민주노동당도 11월 ‘대선 10대 입법과제 78대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존 노동소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대회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호소한 것도 이런 사

[표 1] 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 노동정책 비교

분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임금피크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회서비스·신재생에너지생태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확충 정년 연장 60세 이상 의무화 생활임금·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정리해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 인정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 강화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함 	
실노동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임금감소분 지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중소기업의 교대제 전환 지원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 실근로시간 2천시간으로 단축 초과근로시간 제한에 휴일특근 포함과 최대근로·최소휴식 시간제 도입 유연한 근로시간제 규제 강화 	
집단 노사 관계	노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사 자율협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 정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사회적 대화 강화
	타임 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통해 타임오프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조전임자임금 노사 자율 결정(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구단일화는 합헌, 소수노조 교섭권 침해되지 않도록 적어도 1명은 교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개선(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 행위 제한 관련규정 삭제)

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다보니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상당수가 문재인 후보를 공식

비정규직 대책	직접 고용 비정규직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에 상여금·경영성과급 지급 ■ 차별시정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차별인정 때 동일 조건 비정규직 모두 차별 개선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사용횟수 제한, 사용휴지기(6월~1년) 신설 ■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 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 차별시정제도 신청 주체와 대상 확대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아웃소싱 축소 및 전면 금지
	간접 고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업무 수행 정규직과 차별금지, 고의적 반복적 차별 때 징벌적 손해배상 - 사내하도급업체 교체 때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 - 노조 활동 등 이유 사내하도급 계약해지 금지 -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위반시 직접고용 간주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확대 ■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조정 신설,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제 ■ 직접고용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 위탁업체 변경때도 근로자 권리·의무 승계
저임금근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직접 지원 ■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 때 평균임금 50% 근로자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신청 방식 변경 - 적용제외·감액적용 폐지 ■ 영세자영업자 EITC 전면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 ■ 특수고용직 고용·산재보험 적용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2.10.27. 일부 수정; 레디앙, 2012.11.27.

적으로 지지하고, 또 전현직 간부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재인 캠프로 속속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줄줄이 문재인 캠프로’를 참고하

세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박근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피상적인 인식만으로 그를 지지한다면, 민주노동운동은 향후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유성기업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노동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제

새누리당·박근혜의 노동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총선 전부터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일부 개혁적 색채를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2012년 2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김성태 의원의 주도로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가 공약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장과 감축 추진’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2011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나 11월 (구)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일맥상통하는 공약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노리는 것은 사내하도급을 파견이 아

닌 도급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 사내하도급 법안에서 원하청간 사내하도급계약에 명시해야 할 내용과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하청간 사내하도급계약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더 이상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현행법 해석상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다만 원청의 도급대금 보장,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차별시정제도 적용 등 몇 가지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이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온 성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문재인은 파견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의제로 바꾸자는 것, 또 파견노동자가 차별시정 신청 시 그기간·주체·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낱’입니다. 지금도 자동차업종의 일부 혼재공정을 제외한 작업, 가령 동희오토처럼 사내하청이 100%를 차지하는 공장 노동자들이나 또는 조선업종의 광범위한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법률상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청 사용자들이 ‘적법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노동과정을 형식적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욱 더 ‘불법파견’ 및 ‘정규직화’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1998년 제정 파견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의제’란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2007년 개정 파견법에서 정하는 ‘고용의무’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 시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가령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노동자로서의 지위확인과 함께 미고용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된다면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고용의무 조항으로의 개정을 파견법 개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경우,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벌어지자 다음과 같은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정부와 국회는 일차적으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여 불법적인 간접고용 형태와 활용 관

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②불법 파견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을 양성한다, 합법적인 노무도급과 관련해서는 업무지시권 이외의 영역에서는 불법파견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③그래도 남는 유연성 필요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감안하여 기간제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현대차에 적용하면, 일부 정규직화, 일부 합법도급화, 일부 직접고용 계약직화의 3분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노사의 공동 노력으로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연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이들은 이를 ‘협조적 유연성’ 또는 ‘교섭된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고제

민주노총이 공개한 각 대선후보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질의서 답변 현황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행 정리해고 실태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정리해고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선 시 쌍용차 등 정리해고 발생 사업장 문제 해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해고된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선언하며 전태일 동상을 찾은 박 후보 진영이 이에 저항하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땀살을 잡은 것이 상징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리해고제와 관련하여 나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질의 항목에 대해 문 후보는 “현행법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 허용”하며,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히 선행할 것을 포함해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존 대선공약”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당론으로 확정된 법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19대 국회 개원일에 민주당은 홍용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통합한 이후 민주통합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른바 ‘유럽식 정리해고제’를 구체화한 것인데, 이는 정리해고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총대선 요구안은 ‘정리해고 금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내용은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조치의 강화’라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안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안이 비슷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는데, 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동정책 합의문

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요구와 민주통합당 정책이 대체로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김순자 후보 모두 정리해고제 자체의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민주통합이 집권하여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리해고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연구원에서 최근 세계 경제위기 시 각국의 고용·실업 대책을 참조하여, 정리해고제에 대한 법안 개정을 넘어 포괄적인 고용안정 체계로서 독일식 ‘조업단축지원제’에 주목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연구원의 구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산별/업종 수준에

▽ 11월 13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 이 자리에서 그는 “정리해고 제도를 좀 더 손봐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 합부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참세상)



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협의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 수준에서 교대제·교육훈련·휴가 등을 연계하여 개인별 ‘노동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실업보험제도에서 최후의 고용안전판으로서 조업단축지원금을 제도화하자는 것이지요. 즉, 노사(정) 협상을 매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이란 변형시간 근로제를 적극 활용하여 저임금·단시간 노동을 확산하고 개별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와 같은 고용량의 유연화와 파견제·기간제와 같은 고용형태의 유연화를 거쳐, 이제 ‘일자리 나누기’라는 외피를 쓴 시간제를 통해 임금 및 노동시간 유연화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비판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사 자율협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른바 ‘선진적 노사관계’ 구현이라고 표현되는 친재벌·반노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꽤 적극적으로 노조법 재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적하듯이, 문재인 후보의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정책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지요.

이미 2011년 4월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민생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및 노조법재개정을 위한 야3당·양대노총 공동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조법 관련 5개항 합의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조법 전면 개정 8대 요구> 중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에 대해 공동입법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및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견은 산별교섭 제도화의 경우, “법으로 명시할 문제가 아니고 자율교섭이 보장된다면 노사관계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배가압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형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제도 자체의 폐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민주당은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요구에 대해서도 "타임오프가 의미있는 제도이므로 과거로 되돌리는 방향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가 막판에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기존 민주당 정권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날치기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 법안을 무효화하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정책의 모순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통합당의 노동 정책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이들이 집권할 경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류가 노동자운동 내에 팽배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노동계 인사들은 비정규직·최저임금, 정리해고, 노사관계 분야에서 민주통합당과 이미 합의되었거나 정책상 공통분모를 가진 공약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가능할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도 기본 방향과 중심과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을 구성, 추진하기만 하면 실현될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정 협의기구입니다. 문제

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상응하는 ‘노동민주화’를 위해, 기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계와 양대노총 전현직 간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창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자운동 내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또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기구는 커다란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협의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든 불참하든 간에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 노동유연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 관철되는 도구로 작동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노사정 협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할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지요. 노동자운동은 ‘떡 줄 놈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격’이 되지 않도록 노사정 협의기구의 본질을 간파하고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주통합당 정책의 한계는 한국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전제로 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의존하고 있고 또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속에서 국부유출·자본도피·산업공동화의 모순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이 펼쳐지면서 계급대립이 격화될 때 비로소 민주통합당의 위선과 기만, 또는 내부 모순이 드러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줄줄이 문재인 캠프로

문재인 캠프는 출범 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제휴 노력과 친노동 행보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동계 인사들을 적극 포섭했습니다. 문재인 민주캠프 노동위원장은 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석행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노동진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맡고 있습니다. 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한 후, 이들을 매개로 노조로부터의 지지선언을 조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문재인 후보지지

그 결과, 11월 22일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에 나선 노조가 전국 1,364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 수로는 45만6천 명에 이릅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주로 조직적 지지선언을 했고,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나 전현직 간부들의 개별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로 노동계 전반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모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표 1] 노동조합 문재인 후보지지 현황 (11월 22일 기준)

구분	내용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노조: 화학노련(10만 명), 금융노조(10만 명), 해상노련(5만 명) ■ 지역본부: 광주본부(10,739명), 인천본부(25,025명), 제주본부(2,200명), 부천지부(1만 명), 아산지부(3,000명), 충주지부(2,500명), 순천지부(3,000명) 등 ■ 기타: 노동부유관기관노조(3,500명), 경남지역 택시·금속 노동자(18,000명), 금속개혁연대(1만명),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7,000명) 등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협노조 전현직 간부(100명), 기아차 노동자(419명), 사무금융노동자(1,0500명), 진주(350명), 거제(1,219명), 강원(585명), 인천지역(3,499명) ■ 기아차, 삼성중공업, 사무연맹, 대우조선, 민주노동포럼 등 10여 개 노조 3만 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울산지역 전·현직 노조위원장(각 5천 명, 3천 명)의 경우 양대노총에 구분없이 조직됨. ■ 지난 9월 국민노총 가입 효력 정치 가치분 결정이 내려진 서울 지하철노조 소속 승무, 차량, 역무지부(6,200명)

참고: 매일노동뉴스

과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다가 야권연대 바람에 편승해 민주당 창당 과정에 결합한 한국노총의 기회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행보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민

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대선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조금 더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재인 캠프 행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운동에 헌신해온 많은 활동가와 지식인들은 이러한 전현직 간부들의 행보가 단순히 개인적인 변절이나 배신을 넘어 노동자운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변절과 배신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권행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한 명이 이목희 의원입니다. 1980-199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목희 당시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은 1990년대 말 노사정 위원회 상무위원, 2000년 김대중 민주당 총재 특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를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 금천구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그는 ‘전공’을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비정규악법이라고 불렀습니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비정규직법 권고안을 발표하자 이목희 의원은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일축하고, 심지어 기존 노동운동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에만 관심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태를 왜곡했습니다. 당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제시대 때 일 본인 형사보다 변절한 한국인 형사가 더 악독했다”며 이목희의 배신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어디 이목희 의원뿐이겠습니까? 1975년 원풍모방노조 지부장을 지낸 방용석, 1985년대 용접공을 시작으로 1991년 전국택시노련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을 지낸 송영길 등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변절과 배신은 노동자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이 문제

혹자는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이 초심을 잃고 권력에 취해 기름밥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절과 배신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전 위원장처럼 4·11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에 줄서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는 문재인 캠프 노동위원회에 줄을 서는 출세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지적이 타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노동계 상층부 인사들의 변절과 배신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걸어온 노선의 문제가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 운동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구체화했지만, 정치는 진보정당에게 일임하고 노동조합은 당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에만 치중했습니다. 또 자기 힘의 원천인 현장투쟁, 그리고 사업장을 넘어선 단결과 연대 투쟁을 형성하는데 소홀한 반면, 정당과의 상층 제휴를 통해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2중대처럼 또는 야권 연대의 일각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내에 민주통합당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잠복해있었습니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반MB 야권연대가 본격화되면서

잠복해있던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반MB 야권연대가 공고해지고, 2011년 12월에는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이 창당됩니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민주통합당과의 공동 정부 참여문제가, 민주노총 내에서는 집권시대 노동운동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세력으로부터 이념적, 조직적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올 총선을 앞두고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가입합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석행 전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입당에 대해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일 뿐 민주노총과는 무관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물론 이석행 전 위원장의 입당에 대해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함께 판단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노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구별되는 자기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 이와 같은 상층부 인사들의 행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나마 강경하게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민주노총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투표방침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최초로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민주통합당이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역으로 민주노총이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노총의 행보는 이전 집권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노동계 상층의 로비스트화

노동운동 상층부 인사들의 정치권 행은 노동운동 전반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을 중심으로 끌어간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칩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공약을 보면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법제도 개선 요구를 상당히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캠프에 노동운동 전현직 인사들이 포진해있고, 이들을 매개로 민주노총 상층과의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다른 후보에 비해 성의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의 글에서 살펴봤듯이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전반을 개선하는 근본적 대안과 거리가 먼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과의 정책 조율을 대가로 조합원 득표력 동원에 무게중심

을 실으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 업종별 노조 역시 대세가 된 야권후보에게 실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청원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산별, 업종별 대규모 집회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 스스로의 투쟁력은 점차 유실됩니다.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반복될 경우, 미국처럼 자유주의 정당과 노동자운동 간의 공조 체제가 확립되면서 노동자운동의 사회변혁적 성격이 억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 스스로의 집단적 투쟁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당으로부터 이념적·조직적으로 독립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해온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현직 간부들의 변절과 배신은 이와 같은 노동자운동 전반의 후퇴를 나타내는 여러 징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기초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미중 갈등과 불안한 동아시아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영토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중요한 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갈등의 해결과 함께 사고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의 모순

박근혜 후보는 ‘미국 및 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균형외교가 필

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명실공히 G2로 자리 잡은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인 것은 사실이며, 두 후보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균형 잡힌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으며, 미중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남중국해 하이난선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미군 함정이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영유권 분쟁에도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중국은 자국을 견제 또는 배제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회귀' 전략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테러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의 협조와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아시아 회귀' 혹은 '재균형'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강화(미국과 일본의 ‘군사일체화’, 평택 미군 기지의 거대 군사기지로의 탈바꿈 등 하와이-괌-일본-한국을 연결하는 군사허브 구축)도 꾸준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한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시도에서 알 수 있듯,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날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에서 작전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쟁사령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이양에 따른 새로운 전쟁사령부 설치 시도와 MD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성명, ‘새로운 전쟁 사령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규탄한다’를 참고하세요.)

이렇듯 한미동맹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발맞춰 한층 그 공격적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골적인 군사력 증강을 피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는 다양합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국방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중 양국은 긴밀한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율이나 지적 재산권 등 쉽게 풀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번번이 무산시킨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큼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미국의 군사협력 강화,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 내 인권, 소수민족 탄압 등 전통적인 갈등 요인들이 끈질기게 양국 관계를 괴롭힐 것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인식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행보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 정책이 중국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인식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며,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축으로 작

동할 것입니다.

영토갈등의 심화와 민중 동원

박근혜 후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간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불철저한 역사 인식이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고 진단하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도만이 아니라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비롯한 남중국해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갈등이 심화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과거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맞서 ‘영토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당해보일 수도 있고,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독도수호’는 민중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민중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을까요? 이런 주장은 국가의 경계는 자연적인 것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는 지배-피지배 계급이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민족주의 신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폭력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고,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붕괴시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은폐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민중들의 운동을 무력화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영토 수호나 강한 나라라는 수사 어디에도 심각한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민중들의 삶의 위기나 권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민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토 문제가 심각해지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릴수록 동아시아의 평화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이미 군사적 대응에 돌입했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동원이 강화될수록 각국의 군사력 증강 시도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또한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맥락과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정희찬, 「‘독도수호’가 아닌 반미반전의 관점으로!」, 『사회운동』 통권 54호를 참고하세요.)

동아시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가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

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의 문제가 지적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는 결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격적인 군사훈련, 일본을 포함한 삼각 군사 동맹의 추진, 미사일 방어(MD) 추진 등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그 문제점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나 날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박근혜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을 제시합니다.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에서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등을 토대로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이 통일방안은 일견 햇볕정책이 제시하는 통일 프로세스와 유사

하지만, 남북 간 불신 및 적대관계의 청산을 보다 강조합니다.

[표 1]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박근혜 후보)

정책	주요 내용
주권·안보 확실하게 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L 등 영도와 주권 확고히 수호 ■ 국군 선진화 및 방위역량 강화
북핵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있는 억지력 강화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한 조치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대화채널 상시 유지 ■ 인도적 문제, 정치적 상황과 분리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서울 프로세스’ 추진 ■ 남방경제권외교,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큰 통일(정치통합)로 ■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 북한인권법 제정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합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신뢰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용이건 원칙적 대북정책이건 성공할 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남북 사이에 맺은,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맺은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해야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전제라는 점입니다. 이는 재원조달방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

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 재원조달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남북 간 신뢰가 자리 잡기 전에는 경제협력 활성화도 없다는 것이고, 이 신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북한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지원이나 협력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현재 자세와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실상 그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승인하는 가운데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로 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상회담 개최나 대화채널의 유지를 제시할 뿐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의 재현: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남북경협이 추진되었지만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입니

다. 따라서 문 후보는 포괄적 경제협약 체결로 남북경제연합을 구성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평가하고 있듯이 남북 간 경제협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표 2]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추진과제(문재인 후보)

정책	주요 내용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 경제연합'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 ■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탄생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 중 경제적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선택 ■ 환동해경제권: 부산-울산-포항-삼척-동해-나진선봉-중국-러시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 환서해경제권: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 동부지역이 묶이는 광역경제권.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 인구 6억 명의 초대형 시장 ■ 물류와 자원, 에너지의 중심인 동북아 개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성장과 한국의 북방대륙 진출을 위해 취약한 북한의 인프라 개선 ■ 한국과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
평화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역할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상시 가동 ■ 6자회담 9·19 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4개국 포럼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문재인 후보의 구상은 남과 북이 우선 경제통합을 이루고, 이

를 정치통합으로 확대한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정치 문제와 무관하게 경제적 교류를 먼저 추진해 협력을 확대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는 한국이 담당하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은 북한의 핵심 협상 대상인 미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대북전략에 철저하게 종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남북의 경제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적극 지원했지만,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무시했습니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이 한반도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핵심적 주장들, 예컨대 미군무력(특히 핵무기와 핵우산)의 철수나 남북한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남북 불가침선언, 북미평화협정) 등의 문제는 남북 간 협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이 별개의 것이 되자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체제의 안전 보장 문제는 철저하게 미국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 축으로 남한 자본이 주도하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재편을 추구하고, 다른 축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을 형성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고 이후 로켓 발사 시험과 핵보유국 선언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핵 실험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즉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이전 대북 정책(클린턴 정부의 페리프로세스)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철저하게 종속된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 역시 이제는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동아시아 패권을 승인하는 가운데 남과 북이 일정한 경제 통합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영역의 문제, 즉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남북 협력이나 교류는 언제든지 무(無)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방한계선(NLL) 논란

박근혜 후보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후보는 NLL을 확실히 수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지점을 서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에서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고,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 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NLL이 경계선이므로 북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합의한 적은 없지만 북이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서해 5도 영해를 넘나들었던 북한이 그것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북이 이미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한강하구를 둘러싼 지극히 제한된 구역만을 인정했을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NLL의 유래입니다. NLL은 195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군 작전통제선입니다. 미국은 북침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권을 규제하기 위해 작전 한계선을 설정하고, 한국 해군이 서해에서 임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이 “북방 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설정한 작전통제선을 북한에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한편에서는 NLL이 ‘클라크 라인’을 계승한 것이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클라크 라인이란 정전 당시 해상봉쇄를 위해 미국이 유엔총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해안봉쇄선입니다. 그리고 클라크 라인은 정전협정 2조 15항(해안봉쇄금지)에 따라 1953년 8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클라크라인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여 군사행동을 벌인다면 해주항을 포함한 북한 황해도 연안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쇄당하는 입장에서라도 군사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NLL의 존재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언제라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9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NLL 남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그 북쪽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면서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평도 사건 이후 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들며, 더욱 강경한 군사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서해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연평도 사태와 위기의 한반도』를 참고하세요.)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둘러싼 안타까운 논쟁

지난 11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의 마음 같은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나라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슬로건은 선거전략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많은 여성들이 소위 금녀의 영역인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 자체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슬로건이 특히 수도권 중산층 고학력 여성으로부터의 득표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슬로건 발표 직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여성층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근혜의 여성정책: 일가정 양립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여성정책은 과연 여성에게 긍정적 일까요? 아래 표에 있는 박근혜 후보의 6대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그 핵심을 차지합니다. 1-4번 정책은 모두 일가정 양립 및 출산장려·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정책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 박근혜 후보의 6대 여성정책

정책	세부내용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정부 요직에 여성 중용, 여성관리자·여성교수·여성교장비율 제고 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지원	직업훈련, 직장알선 등
임신과 출산 부담, 사회가 함께 책임	저소득층 가구와 고위험 임신부 지원, 농어촌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자녀 양육비 지원 인상, 공동주거시설 확대와 일 자리 알선,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 신설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성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한 가정 내 공백을 채울 공적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경제위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핵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의 정부 요직 진출,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부담 완화 같은 정책들은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둘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생색내기식 정책인 것입니다.

[표 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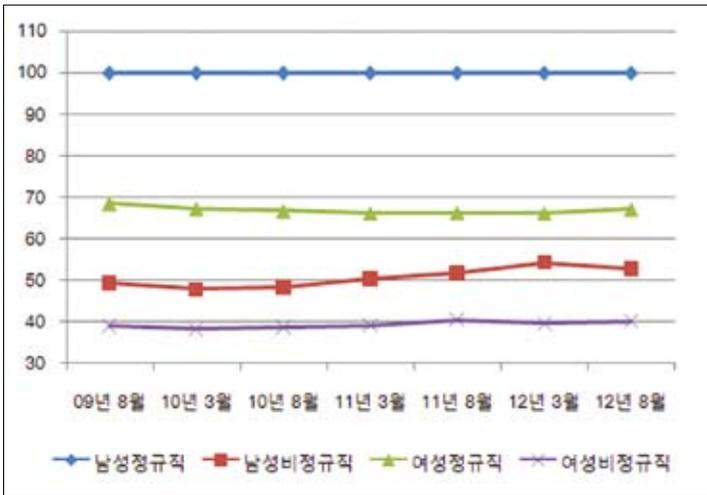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134	7,600	100.0	100.0	57.1	42.9
정규직	6,172	3,085	60.9	40.6	66.7	33.3
비정규직	3,962	4,515	39.1	59.4	46.7	53.3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 11)

또한 박근혜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으로 직업훈련과 알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여전히 소수 정규직을 제외하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임신을 하면

암묵적으로 퇴사를 증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 후보의 정책에는 그 동안 정부가 방관해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가 빠져있습니다.

[표 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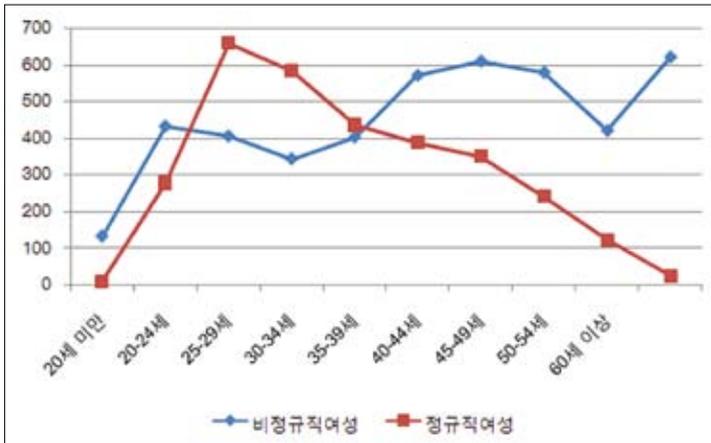


*주: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상대적 격차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 11)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역시 직업훈련과 알선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IMF 이후 전체 노동자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합니다(표 2, 표 3 참고). 이는 정부와 기업이 여성은 일도 하

고 가정도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단시간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가장이 생계를 부양한다는 편견으로 여성의 노동은 보충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낮은 임금을 강요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보육, 간병 등 기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표 4] 여성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 명)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 11)

이런 조건에서는 직업훈련과 알선을 해봤자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다시 고용될 뿐입니다(표 3 참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도록 구조화된 여성 노동시

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직업훈련과 알선이 아무리 확대 되더라도 그 정책은 일부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여성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낮은 노동조건, 공공서비스의 부족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여성에게 값싼 노동력이자 무급의 가사노동력으로서 이중의 부담을 지우면서 경제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쩔든 가사와 양육은 여성이 모두 책임져야 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출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여성노동자 권리선언 해설서』를 참고하세요.)

아동 성범죄 강경대응

박근혜 후보는 줄곧 아동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강조해왔는데, 최근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확정됨에 따라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아동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사형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다. 또 그는 '2005년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전자발찌법을 통과 시켰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근혜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과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지만, 동시에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과의 공감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여성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몇몇 '비정상적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이들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의 일탈적 행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술을 마시고 행한 실수, 좋아하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일, 변태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행 등



으로 풀이되곤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아동포르노를 즐겨봤다거나, 게임에 중독되었다거나, 대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 그들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범행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성폭력과 성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양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문화 일반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과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섹시함을 강조한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행태가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술시중을 드는 서비스부터,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이 대규모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여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성문화에 익숙해진 남성들이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욕을 표출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그러한 성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여론으로 전환시키려는 박근혜 후보의 전략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길과는 거리가 멍니다.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성차별적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

엇보다 민중들이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서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때 실질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비판은 <사회화와노동> 581호, 「성범죄, 감시와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를 참고하세요.)

안타까운 여성대통령 논쟁

안타깝게도 박근혜의 여성대통령 슬로건을 계기로 촉발된 논쟁 속에서도 역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반성, 진정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성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슬로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출산과 보육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은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 “박 후보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황상민 교수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보지 않은 박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면 여성에 미달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박근혜가 분만대 위에서 박정희를 출산한 그림 <골든타임>은 더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처녀 논란 및 박근혜 출산설에 착안해 딸이 아버지를 낳는 장면을 그려넣은 이 그림은 정치적 풍자라기보다는

여성성에 대한 공격과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 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 “미혼여성에 대한 집단모독”이라고 반격했고, 나아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박 후보의 인생을 “국가와 결혼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기묘한(?)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방어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논쟁 구도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의 슬로건에 진정성이 있는지, 그의 정책이 여성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그의 과거 정치행적과 현 정책을 두고 논쟁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결혼 및 출산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은 현실은 여성과 여성정치인을 바라보는 기성 정치권의 시각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선택의 문제이고, 또 결혼, 출산, 보육의 경험 여부 자체가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상식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여성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우게 된 데에는 지난 10여 년 간 민주당과 주류 여성운동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면서, 여성=부드러운, 여성=반부패, 여성의 정치진출=진보라는 등식을 강화해온 것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명숙 의원이 2006년 총리로 임명되자 여성단체들은 뜨겁게 환호했고 여성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깨끗한 소통의 새로운 정치를 열 것이

라 기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이번 박근혜 여성대통령 슬로건과 관련 “박 후보는 여성 대통령의 덕목인 평등, 평화지향성, 반부패, 탈권위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등식은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이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와 쇄신”이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쓰듯 “나라살림 가계부”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등식을 차용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여성대통령 슬로건은 민주당과 주류 여성운동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빈곤과 차별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대중운동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운동전략 보다는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급급했던 여성운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편, 박근혜 후보와는 정반대로 문제인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특전사 경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제인 후보는 지난 11월 1일 강원 지역을 찾아 “군대도 안 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수두룩한 정당이 어떻게 안보를 말할 수 있나”며 “나는 6.25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란 온 피란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싹쓸이한 강원지역 그리고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성을 강조하는 박근혜 후보와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후보는 과거 지배 양당 간 논쟁구도를 뒤바꿔놓은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행보는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일정한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세력 내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고, 자유주의 세력 내에는 문재인 후보의 행보를 씩씩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가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은 양자 구도에서 어차피 자신에게 투표할 고정 지지층의 반발을 일정부분 무릅쓰더라도 상대방의 지지층을 흔들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때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과 그 문제점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표현되듯 미래 세대와 관련되고, 또 개별적으로는 교육비 지출 및 자녀의 계층상승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대선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국가 교육재정 확충,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등을 핵심적인 교육공약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반값등록금 정책

먼저, 대학교육의 핵심 이슈인 등록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 이후,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등록금을 낮춰야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의 방식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우, 명목등록금(각 대학생의 고지서 상 등록금 액수)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대학의 연간 등록금) 약 14조 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3조 원 씩 국가장학금에 재정을 투입하되,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선별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수령액도 적어 대학생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높은 등록금이 대부분의 계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목등록금 자체를 낮추기보다 국가장학금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안에 따르면 대학은 어떠한 등록금 인하 노력



도 강제받지 않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소요도 그만큼 많아지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도 높아집니다. 사학재단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표 1] 각 후보의 등록금 정책

구분	박근혜	문재인
목표	등록금 부담 반감	명목등록금 반감
지원 방식	개별 학생 지원(장학금 방식)	개별 대학 지원(교부금 방식)
	-	국공립대부터 반값 시행
	소득과 성적 연계	-
추진 계획	2014년까지 실현	2013년 국공립대 시행 2014년부터 사립대로 확대
대학 규제	등록금 인하 대학 인센티브 부여	교부금 신청 대학에 대한 정부 개입력 강화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2013년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 사립대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



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각 대학에 지원한다는 안입니다. 교부금을 받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명목등록금이 절반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금을 받는 대학의 회계를 검토하여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정부가 정한 등록금 표준액의 1.2배 한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대학에 대한 개입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2011년부터 진행된 반값등록금 투쟁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대학생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둔 채 법인 전입금을 거의 내지않고 있는 사학재단을 강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역대 정부는 사학재단의 직접적 경영개입 및 이윤추구를 묵인해왔으며, 사학비리 역시 묵인하거나 미미한 차원의 징계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력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은 민주통합당 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 역시 민주통합당 입장과 대립

됩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등은 교부금 형태의 재원확보방안이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 칸막이를 만들어 재정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따라서 교부금법의 제정 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정되더라도 사학재단에 대한 국가의 개입력은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배세력 내에서 대학에 대한 국가개입 수준이 어느 정도로 조율되든 간에, 대학의 시장화·기업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자체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등록금 장사 이외의 또 다른 수익창출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학협력단에 의한 기술주회사와 학교 기업 설립으로 대학이 용역 수주, 산학협력단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수입,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적재산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이윤창출 동기와 산학협력이 강화되면 대학의 교육과 연구과정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도 동시에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입시정책

등록금 정책 이외에 각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또 하나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 축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무시험입학 전형을 도입했지만 각 대학은 변별력이 없는 생활기록부보다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을 강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등급제를 도입해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는 대신 내신을 상대평가로 강화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내신성적 기재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고 논술고사를 병행 실시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교육 팽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입 다양화 정책 역시 그 의도는 사교육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별력을 다양화해 재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한 가지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능력 중 몇몇 능력만이 인정받고 이는 특정대학의 특정학과와 노동시장에서 특정직업으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계화된 노동시장과 상응하여 여전히 서열화된 대학과 학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책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 유형은 3,0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전형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입시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또 입시전략에 적합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공교육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표2]의 ⑤에 해당).

[표 2] 변별력을 기준으로 본 입시제도 개선 방안 비교

구분	방안(예시)	목표	한계
변별력 없앰	① 입시 철폐	교육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쟁 또는 취업경쟁의 시기를 늦추는 효과, 사교육 비지출시점도 늦춰짐 ■ 교육연수 증가
	② 법적 강제 (채용 시 학력기재 금지법)	학벌주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별력의 기준이 될 것 ■ 성인사교육, 유학 등 팽창
변별력 축소	③ 입시 성적 반영 방식 변경	내신과 수능(또는 과목) 중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은 시험과 관련 경쟁교육 및 사교육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과 수능(또는 과목) 중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시험과 관련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강화 ■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축소 될 경우,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별력의 기준이 될 것
	④ 공교육이 사교육 지원 (방과 후 학교, 방송과외 등)	농산어촌 등 사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의 교육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사교육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효과 미미
변별력 다양화	⑤ 다양한 능력 평가	각 능력 분야별로 경쟁이 이루어 지더라도, 획일적 평가보다는 경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유리한 대학, 학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 미미

강일국, 「사교육 정책의 역사와 의미」를 참고하여 재구성.

변별력을 다양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대선 후보들의 입시정책은 변별력을 축소하거나 변별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입시제도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전형을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위주로 단순화하고, 점진적으로 수시에서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없애는 계획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유지하되 그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입시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시와 정시에서는 변별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존 대입 전형 다양화 정책의 폐해를 일정부분 완화하겠지만 여전히 수능과 내신관리를 위한 일렬 경쟁을 완화할 수는 없고, 게다가 경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그 외의 다른 변별 요인을 대학이 추가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2]의 ③에 해당).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이 학생을 공동선발함으로써 중고등학교 입시 스트레스 및 사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서열화된 대학의 피라미드 중상위층에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거대 모집단위를 뒀으로써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후보는 학력 블라인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모집군을 통해 대학서열의 중상위 구간에서 변별력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서열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공립대가 중상위 또는 상위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불가피하게 사립대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국공립대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만약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가 대학서열의 중하위권에 위치하게 된다면 서열 완화 및 경쟁교육 완화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립대학이 통합네트워크에 포괄된다면, 대입에서의 변별력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학졸업증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별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과 스펙을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학졸업증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자격증 및 스펙 쌓기를 위한 성인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표 2]의 ①에 해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학력블라인드 표준 이력서 제도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변별력을 없애는 방안으로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표 2]의 ②에 해당).

교육개혁의 이중성과 진보적 교육운동

이처럼 각 대선후보의 등록금 정책과 입시정책은 현재의 교육위기를 해결하는 대안과는 거리가 멍니다. 등록금 정책들은 국가 재정지원 방식 상의 차이를 떠나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10년 간 진행된 대학의 시장화·기업화와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대학 시장화, 기업화에 대한 분석은 전주범, 「한국 대학교육 현실과 정부 대응방향 분석」, 『사회운동』 통권 104호를 참고하세요.)

입시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 시기 급격히 늘어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교육 과정 이후 겪는 청년실업 문제, 다시말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과 결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드러나는 진원지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것일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너진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다시금 강화함으로써 지배세력의 정당성을 재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한 결과 누적된 노동자의 불만과 투쟁을 무마하고 이를 개별적 계층

상승욕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현재의 등록금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만약 졸업 후 기대소득이 학자금 대출을 충분히 갚을 정도로 높다면 이처럼 큰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배세력은 등록금을 일부 낮춰 위계화된 노동시장 상위를 향한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경쟁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입시정책 역시 계층상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되는 대학졸업장을 얻는 데 동반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평등한 교육기회 이후에 겪게되는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는 인식을 확산합니다.

지배세력의 교육개혁 방안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민중운동의 일부로서 진보적 교육운동이 스스로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대입제도의 개선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교육감 당선만큼이나 중요한 것

한편, 이번 대선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서울지역 유권자는 전국 유권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이들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후보들에게 동시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 야권 단일후보와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가 메이트처럼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각급 노동조합, 진보적 교육운동, 한국진보연대 등 민중운동 대다수는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 추대위'를 구성해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용린, 남승희, 최명복, 이상면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등록 상황만 놓고 보면 2010년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진보교육감의 당선이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차분히 돌아봐야 할 점은 진보교육감과 민중운동의 관계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매개로 야권연대가 본격화되고 전국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중등교육에 경쟁원리가 전면 도입되고, 전교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과부로부터 일정한 우산을 쳐줄 수 있는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민중운동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별로 편차가 있었으나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사고 지정 등과 관련 교과부와 일정한 갈등구도를 형성했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문제는 소위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민중운동이 야권연대와 진보교육감의 영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주체적 관점을 상실해왔다는 점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민중운동은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보교육감과 타협과 조율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가령, 학생들의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참여보장 및 출석 인정 여부나 교원평가 독소조항 제거와 관련해서 진보교육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진보적 교육운동의 상황은 통합진보당 창당이 상징하듯 민중운동 전반이 무원칙한 야권연대에 흡수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민중운동이 자기 노선과 주체적 관점에 입각한 투쟁과제를 중심에 두고 그 성과를 축적해나가는 가운데 진보교육감과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중진영 대중조직의 분열과 무기력한 대선투쟁

노동자운동

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대 과제, 78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MB정부 5년 동안의 폐해로 모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를 언급하지만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의 정책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 등 ‘대중투쟁을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정리해고 등 노동계 현안을 포함해 한미 FTA, 복지, 한반도 평화 등 민중운동 진영의 요구안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안은 다양한 투쟁 과제나 입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뿐, 이를 실현하

기 위한 민주노총의 뚜렷한 방침이나 투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이하 새정치특위)를 구성해 18대 대선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방침’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정권교체’를 중심과제로 하는 독자후보안은 통합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 탈당파의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정치특위는 이정희 대표의 출마를 확정된 통합진보당 세력과 그 비판 세력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다가 양자 모두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독자후보안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거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채 ‘진보적 정권교체’만을 대선 방침으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이 무기력하게 마무리되면서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선시기 대중투쟁 계획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쟁점화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 현안 투쟁을 대선시기 정치 의제화하는 투쟁계획도 제출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참정권운동 등 대선시기 캠페인 수준의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안철수, 문재인 캠프행이 줄

을 잇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부재 속에 일부 산별노조, 연맹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리적이고 무원칙한 야권후보 지지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표 1] 민주노총이 발표한 '10대 과제, 78대 요구안'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5년 동안의 실천과제 : 10대 과제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보장
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단축
3.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기업,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자리 보장
4.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화 강화
5.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6.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7.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 참가 활성화
8. 의료, 교육, 노후, 빈곤철폐, 주거 등 5대 복지기본권 보장
9.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10.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농민운동

11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2012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 주요 요구는 '한미FTA 폐기! 한중FTA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였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FTA 추진 중단과 주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해 생산과 가격을 안정화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지난 9월 26일부터 ‘공공비축미 출하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양곡정책 거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농민총회와 총투표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농민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공공미 출하거부, 농민대회, 나락 적재투쟁, 청와대 농산물 반납 시위 등을 통해 투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농은 지난 9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농업회생을 위한 농정 대개혁 6대 요구안’(△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농민적 농지소유 확립 △협동조합 개혁 △농업재해보상제도 확립 △농민복지, 교육문제 해결)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농을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이 포함된 한국농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농민단체와 축산업단체가 모여 2011년 3월에 출범)는 ‘농정공약 요구안’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표2] 한국농민연대의 농정공약 7대 제정, 3개 개정 요구안

7대 제정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4.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법 제정
2.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5.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3. 종자보호 육성관련 법안	6.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7. 목표소득직불제 도입
3대 개정과제	
1. 농협법 전면 재개정	3. 통상절차법 개정
2. 농지법 개정	

전농은 통합진보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결정한 정치방침과 대선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전농 이광석 의장은 이정희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11월 23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할 민주당의 농업정책은 ‘철학이 없다. 농민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평한다’면서 ‘이정희 후보는 한미FTA 폐기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분명히 약속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실종된 진보의제를 살려 야권연대를 이루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해, 대선에서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농의 조직적 통합진보당 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층에서의 반발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0일 사천시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집단탈당을 선언했고, 전농 제주도연맹은 9월 24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사천시농민회는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명확한 중심을 잡고 전국의 농민당원과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전농이 어떠한 입장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전농의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빈민운동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3월 5일, 빈민 3단체(반빈곤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는 통합진보당과 ‘빈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빈민운동 조직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빈민연합은 지난 8월 8일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혁신하는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전국빈민연합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전국빈민연합은 결의문에서 ‘쇄신과 혁신을 외면하고, 진보정치의 가치를 훼손해 버린 통합진보당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활동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빈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을 비롯 대부분의 빈민운동 조직들은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향을 철회했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대선 방침이나 후보 방침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빈민운동 진영의 요구를 알리고 대선 시기 쟁점화할 수 있는 여러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을 상대로 철거 용역 관련 예산증액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빈곤운동을 중심으로 제 민중운동 단위들이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의 무기력

민중운동 대중조직들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지지·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지고 분열하면서 그 운동의 기반인 대중조직의 분열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농민운동과 빈민운동 역시 진보정당의 침몰과 분할 속에 조직 내 갈등을 겪으며 위력적인 투쟁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농의 경우 비단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당시에도 조직적 분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운동의 침몰 속에서 선거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채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중운동 진영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힘차게 밝히고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전국노동자대회 역시 무기력하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수사 아래 노동자 민중을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부대로 전략시키고, 독자적인 투쟁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민중운동은 마치 ‘개점휴업’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세력화 운동의 침몰: 200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 약사

민주노동당 분당

2000년 1월 30일 창당한 후 16대 총선(2000년)에서 1.2%, 16대 대선(2002년)에서 3.9%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2004년)에서 13.1%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 10명의 국회의원(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했습니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6명이 당선되었으며, 정당득표에서 12.1%를 득표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7대 대선(2007년)에서는 이전 대선보다 24만 표가 줄어든 3.0%에 불과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7대 대선에서의 참담한 패배 이후 당 내에서는 ‘중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성현 대표가 사퇴한 후 출범한 ‘심상정 비대위’는 당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평가, 편

향적 친북행위, 복핵 및 자위론,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조직 혁신, 제2 창당 추진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2월 초 열린 임시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되고 ‘자주파’가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죠. 이에 반발한 세력들의 탈당이 이어졌고, 심상정·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주류화 전략과 진보정당 운동의 우경화

대선 실패를 둘러싼 논쟁에서 ‘평등파’는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원인으로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자주파의 비민주적 행태와 권력 독점은 분명한 문제였지만,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자주파만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등파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과 공명해 ‘종북주의’, ‘주사파’ 등 이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을 취하면서, 좌익적 이념 전반을 공격하고 대안적 이념과 사고를 봉쇄해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선동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초기에 운동적 성과를 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발언력을 확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운동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노동자운동이 지역 영향력이 취약하

고 주류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각 지역 지구당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운동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당의 인력 및 재정 배치는 의정 지원에 편중되었습니다. 또 당의 정치이념을 급진화하고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과 입법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노선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직, 공직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도 격화되었습니다. 당내 정파 활동의 초점 역시 정당의 이념과 운동이 아니라 당권 장악과 공직 진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한계는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이어졌고 이후 전개된 진보정당 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MB 연합과 진보대통합

분당 이후 치러진 18대 총선(2008년)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 득표율 5.7%로 17대 총선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진보신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진보정당 운동의 상승세가 분명하게 꺾인 상황에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행태가 노골화되는 반면, 이에 대

항하는 민중운동의 힘이 크게 약화되자 진보진영에서는 ‘반MB 연합’이 마치 시대적 과제인 것 마냥 회자되었습니다. 한편으로 2009년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북구의 조승수 후보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되고, 이를 통해 진보신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자 ‘진보대통합’에 대한 대중적 요구도 커졌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5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4개 시민단체가 반MB 연대를 목표로 ‘5+4 회의’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잠정 합의문을 거부하며 탈퇴해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독자 완주를 했고,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불과 4천여 표차이로 패하자, 단일화를 하지 않은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6·2 지방선거 이후 반MB를 목표로 한 야권연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출범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는 집권으로 상징되는 주류화 전략을 전면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반MB 선거연합 전술을 공식화하고, 2011년에는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했습

니다. ‘친노의 적통’을 자처하던 국민참여당은 취약한 조직세를 만회하여 범야권 내에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부상하기 위해 이념, 노선을 대폭 우경화한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자 총선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심상정, 노회찬 등 새진보통합연대는 결국 당을 탈당하여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된 바 있던 민주노동당은 새진보통합연대의 합류로 손쉽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신설 합당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진보정당 운동의 침몰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라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때로 모순적인 이념과 역사를 갖는 정치세력들이 통합한 정파연합당이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모토로 창당한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비국민참여당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다 끝내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가 이념과 역사의 차이를 무시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합당한 것은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퇴행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2012년)에서 정당 득표율 10.3%, 국회의원 13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배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지만, 총선 직후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등의 사건을 거치며 역사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 나아가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 및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창출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급조되었습니다. 결국 주류화 전략에 따라 당권 장악과 공직 진출에 초점을 맞춘 진보정당 운동은 ‘총체적 부정’과 파행 속에 침몰한 것입니다.

정치세력화, 한 순환을 마감하다

오늘의 진보정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는 그 조직적 기초를 이루는 대중조직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당원의 40%를 차지했던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답게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 활동을 소홀히 하고 노조를 진보정당 운동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부대로 전략시킨 것이 큰 문제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총은 ‘야권 단일화 후보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는 선거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단기 성과와 실리에 매몰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취지는 사라졌고,

이는 결국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를 정당화했습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19대 총선(2012년)에서 조직 내부 반발을 무시하고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삼는 선거방침을 밀어붙였습니다. 진보민주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정세 인식 아래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여소야대를 목표로 한 총선 방침은 결국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지지방침은 철회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념적, 조직적으로 분별 정립하려던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화 운동의 몰락은 분명해졌습니다.

세 명의 진보 후보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3명이 출마하였습니다. 세 후보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 명의 진보 후보

대선 후보로 최종 등록된 7명 중 무려 3명이 진보진영 또는 민중운동 출신입니다. 기호 3번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기호 5번으로 무소속 김소연 후보, 기호 7번으로 무소속 김순자 후보 모두 세 명이 입후보한 것이지요. 이정희 후보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자, 서민이 힘이 있는 대한민국, 답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우리의 정치다. 정권교체를 넘어서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

치와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통령’을 강조하는 김순자 후보는 ‘다른 노동, 다른 정치, 다른 세상’을 표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기호 4번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저의 사퇴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로 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모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통합당 짝사랑,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는 현재 진보정치의 분열과 위상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력, 인물입니다. 이들은 과거 민주노동당 분당 뒤 당권을 장악하여 당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폭 우경화한 뒤 국민참여당과 ‘묻지 마’ 합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출 및 연립정부 참여를 목표로 민주당과 무원칙한 반 MB 연대를 추구했습니다. 급기야 총선 직후 후보 공천을 위한 내부 경선에서 부정 선거 시비가 불거졌을 때에도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진보진영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기 정파의 생존과 이해를 위해 후보를 출마시킨 뒤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 참여와 지분 확보에 목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구

애의 대상인 문재인 후보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말입니다.

대선 후보로 최종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러한 비판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탈당, 진보신당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뒤, 또 진보신당에서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당권 파와 결별하여 진보정의당을 결성한 굴곡진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당적을 쉽사리 옮긴 철새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참여당계가 당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진보정의당의 노선,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결코 진보정당의 노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입니다.

‘독자 완주’ 노동자 대통령 후보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의 야권단일화 대선 전술을 비판하면서 대선 완주를 목표로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선 김소연 후보는 그 스스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자, 변혁적 노동정치를 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추대한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이 야권단일화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 정치가 미국식 양당 구도로 재편되어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영원히 주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김소연 후보의 출사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박근혜·문재인 양대 구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노동자 투쟁 이슈를 적극 선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김소연 후보를 비롯한 '노동자 대통령' 후보 전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한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자 대통령' 후보 진영만이 아니라 우리 민중운동 전반이 처한 곤란함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민중운동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대선을 포함하여 향후 진보정당 또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반성과 평가를 전제로 한, 민중운동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민주노총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독자후보' 전술은 민중운동 전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대선 방침안이 '독자후보'를 고민하면서도 대선 전술의 주요한 축으로 야권연대를 고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정희 전 대표의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두고 독자후보 전술을 지지하지 않은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대통령' 후보 전술을 고민하던 세력이 '대선 완주'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아권연대와 연립정부에 반대하며 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방침은 추후 결정하자’는 의견을 지닌 세력조차 배제한 채 독자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에 따라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이면서도 통일적인 대선 대응을 모색하던 여러 세력을 폭넓게 규합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투쟁은 일반적인 현안 투쟁과 달리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현장 투쟁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수준을 넘어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맞서 민중적 대안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치·사회 세력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대중에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대통령’이라는 선언을 넘어 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노동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념·노선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일정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이 소속된 진보신당의 대선 방침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복, 탈당한 뒤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순자 후보 역시 민중운동의 총의나 진보진영의 대의를 구현하는 후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를 대비해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하는 후보가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중운동이 민주통합당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민중운동의 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하고자, 대선 이후 새로운 노동정치를 구현하고자 제기된 ‘노동자 대통령’ 후보 전술이었지만, 정작 민중운동 좌파 내부에서도 통합력을 창출하지 못한 채 각개약진하는 양상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랜 기간 이념과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던 민중운동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 속에서 대선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진보진영에 속한 그 어떤 정당이나 후보 진영도 민중운동을 집단적으로 대표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하나의 정파로서 대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분열상도 당장 극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 정파나 의견그룹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민중운동이라는 공통의 지반 위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파 간 갈등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의 파괴적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권과 경제위기에 맞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무엇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진보의 위기

총선 이후 한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통합진보당 추문은 진보진영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곧 '진보의 위기'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진보의 위기'는 민중운동의 이념·노선에 대한 집단적인 반성의 계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반성을 가로막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수냐 혁신이냐'라는 논점부터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작 오늘날 '진보의 위기'의 근간을 이루는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총체적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형된 형태로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수용하여 통합진보당을 우익적으로 비판하는 청산주의적 태도를 논외로 한다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의 맹목적 태도와 결국 통합진보당과의 결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진보정의당의 실용주의적 태도일 것입니다. 서로 악수도 마다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반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는 사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은폐합니다. 즉 진보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패권성과 비민주성을 비난할지언정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한 구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보정의당의 당 쇄신(재창당) 방향은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론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여러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존 진보신당 외에도, 민주노총 안팎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포럼’, ‘노동자정당 추진회의’ (구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변혁적 현장실천·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 평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통합진보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대안 없이,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의 배경을 이루는 민주노조 운동의 침체와 민중연대전선 운동의 난맥상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대안을 동반하지 않은 채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모든 논점을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진보정당 운동 또는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보정당 또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가 말해주듯이 민중운동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진보정당 건설 사업은 이미 실패한 미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보정당 실패의 역사적 원인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는 일차적으로 의회주의와 선거주의라는 정당의 내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발단을 이룬 당직·공직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과거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원내정당화와 수권정당 노선이 강화된 과정에 병행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원내진출을 계기로 당의 인력 및 재정 배치는 의정지원에 편중되었습니다. 또 당의 정치

이념을 급진화하고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노선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직·공직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도 격화되었습니다. 당내 정파 활동의 초점 역시 정당의 이념과 운동이 아니라 당권 장악과 공직 진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정파들이 선거공약에 따라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권력분점을 시도한 산물이 바로 오늘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이념과 역사를 초월한 정파연합당인 통합진보당 안에서 정파들 간의 지분 안배와 당직·공직 진출은 처음부터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대의기구 지분 분할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지난한 논쟁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야권연대 역시 정책연합보다는 실상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과 후보를 조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는 그 조직적 기초를 이루는 대중조직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거듭된 패배 속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을 잃고 단기적 실리에 매몰되면서 우경화한 것이 정치세력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당원의 40%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답게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 활동을 소홀히 하고 노조를 진보정당 운동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부대로 전락시킨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굳건히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보정당은 노조운동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노선을 우경화했던 것입니다.

‘정치세력화’라는 관념의 정정

1987년 대선에서 ‘정치세력화’라는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에,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이 이념적·조직적으로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분별 정립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동 전략 전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실에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정당 혹은 진보정당 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정치세력화 운동의 본래 의미를 되새긴다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민주노조 운동, 민중운동의 단결과 발전에 복무하는 변혁 지향적 진보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 건설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관점을 완

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운동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할 계획 없이 의회 진출이나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새로운 진보정당 또는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제기하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민주노총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당 건설 논의가 중심을 이루면서 구체적인 지역·현장의 실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치세력들 간에 정당의 상과 지향, 정당 건설의 경로와 관련한 이견이 부각되면서 역설적으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정치세력의 주요한 관심사가 당 건설에 쏠려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지역·현장의 운동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활동 역량을 배치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재건하기 위한 역량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당 건설 추진 세력들이 지역과 현장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당 건설로 역량을 집중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의 활동력을 더욱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해야 할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현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모색,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사회운동』 통권 107호를 참고하세요.)

사회운동정당

새로운 진보정당 또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여러 흐름들 사이에 이번 대선 전술을 포함하여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의 성격, 정강, 경로를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 건설을 둘러싼 이견이 대중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한 공동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큼니다. 자칫 새로운 정당 건설의 전망도 대중운동 혁신의 계기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생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운동의 전망을 개척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협력 및 경쟁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새로운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을 결성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강화를

자신의 목표로 삼는 ‘사회운동정당’이라는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 진보정당 운동을 책임져 왔던 세력들이 사회운동의 강화 없이 의회주의·선거주의로 경도된 자기 역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대안적 운동을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당 또는 계급정당 건설을 주장해온 좌파 세력들도 강령 논쟁에 치중하며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지 못한 자기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 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운동전략, 대중노선, 실천기풍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대안적 운동세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민중운동이 처한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모두 승리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는 정말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위기와 민중운동의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이 역설적인 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돌려 지난 15년 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전

15년 전 대선은 경제위기와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환호작약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무정부 상태’에서 한미 경제관료들에 의해 밀실 합의된 ‘IMF 플러스’는 한국사회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IMF 플러스’란 12월 3일 발표된 IMF 프로그램에 더해 한국 정부가 스스로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대선 직후 이를 “IMF 플랜이라기보다 ‘한국 플랜’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며 부실 은행과 재벌을 구조조정할 때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12월 24일 ‘IMF 플러스’가 공식 발표되었고, 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불렸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사상 초유의 비상 위급 상황을 틈타 김영삼 정부가 실패한 미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강력히 시행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위기·외환위기를 ‘국난’으로 호도하며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인민주의적 수사를 남발했고, 그를 통해 대중의 저항을 미연에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 또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나 개혁적 비정부기구(NGO)가 동원되었는데, 이는 정책개혁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였을 따름입니다. 이를 통한 재벌개혁이란 것도 실은 기업 지배구조를 미국화하여 재벌을 지주회사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금융세계화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이후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 및 국부유출이라는 문제와 함께 국내자본의 국외도피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강력한

구조조정에 동반하는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와 같은 노동유연화 법제화와 평가절하를 통해 한국경제는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민중운동

그렇다면 당시 민중운동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1995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모토로 출범한 이후 1996-1997년 총파업의 한계를 ‘국회의원의 부제’에서 찾은 민주노총은 1997년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IMF 위기의 격랑 속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를 표방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는 선본 내부에서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어이없는 논란을 거듭하며 1.2%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데 그치고 맙니다. 1998년 1월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및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받는 대신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를 수용합니다. 노사정 합의에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2월에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탄핵당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진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주5일제에 따

른 주 40시간 노동과 변형근로제를 교환합니다.

15년 전 당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내포한 위기의 징후였다면, 지금 미국·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위기가 폭발한 것입니다. 당시 ‘민주화 세력’이 경제위기·외환위기와 지배분과 내부의 분열을 배경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면, 현재 이들은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비판적 평가 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보완책에 다르지 않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총파업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치방침의 재수립은커녕 지도부의 공백 속에 표류하고 있고,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토대 위에 정파연합으로 건설된 진보정당 운동은 2011-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경과하며 사분오열된 채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이 비극이었다면 이번에는 웃지 못 할 희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민중운동이라는 정체성마저 희미해진 지금, 우리의 반성은 15년 이상의 깊이를 요할지 모릅니다.

2013년,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인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

급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민중운동 고유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편으로 '개혁'에 체제 내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패퇴했던 민중운동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무원칙한 '반 MB 연대'를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연대 투쟁'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중운동은 자신을 '진보·개혁 세력'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곧 전 집권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지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민중운동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체적인 투쟁 태세를 갖추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개혁적인 정권일지라도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위기라는 제약 속에서 차기 정권은 선거 시기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같은 일부 개혁적 수사들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재벌 체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현실화하려면 민중운동의 실력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운동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산업·업종 전반을 아우르는 연대임금·연대고용·중앙 교섭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원하청구조와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사외하청을 포괄하는 산업·업종 차원의 임금·고용 정책이나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1997-1998년 위기와 2007-2009년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경제위기 시기 자본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입니다. 쌍용차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한계기업의 청산 및 구조조정·정리해고라는 문제와, 특히 초민족자본의 인수합병·자본유출·기술유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거 구조조정 대응은 대개 단위사업장 차원의 정리해고 반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구제금융의 조건과 관련하여 정리해고 반대 외에도 국제하청 탈피와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소유자 청산, 경영자 교체)를 통한 독자 생존이라는 쟁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때 경제위기 하 고용·실업 대책으로 거론되는 노사정 협약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통 분담’ 논리가 부활하며 저임금·단시간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변형근로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위기에 사각지대로 몰리게 될 민중들의 기초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펼쳐야 합니다. 복지 정책의 수

혜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로서 투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점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민중운동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다는 점을 명확히 폭로하면서 반전평화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

이러한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민중운동은 허물어진 자신의 조직적 토대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처한 안팎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밖으로는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밀리고, 안으로는 조직률이 하락하고 운동 혁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악선전 속에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정당성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법·제도 개악과 민주노총의 골간을 이루는 핵심 노조들에 대한 외해 공작이 진행되면서 노조 자체를 지키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설상가상으로 내부 분란과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공백 상태에 있는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재건하기 위해 모든 운동 세력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

다.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활동가들이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민주노조 혁신과 재건을 위한 공동활동과 공동논의를 통해 조직적 전망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복구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은 현안 투쟁을 지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목적의식적으로 노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적극 투여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의 진전을 위해서는 모든 정파·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자신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서도 경제위기 하에서 정권과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더 참신하고 훌륭한 모색과 실천들이 이미 곳곳에서 제기되거나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도 대선 이후에 이상의 고민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2013년 이후 민중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토론 부탁드립니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